데스크 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정치부장

설 연휴가 지나자 여야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보선은 내년 총선 이전에 치러지 는 유일한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진단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 기에 박근혜 정부 3년차의 정국 운영 주 도권이 걸려 있다는 점에서 여야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보궐선거 결과가 새로이 출범한 여야 지 도부의 입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도 관 전 포인트다. 이번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세 지역(경기 성남중원, 서울 관악을, 광주 서구을)은 모두 야권 지지세가 강한 지역 이다. 하지만, 최근 야권 분열이 가시화되 면서 전반적인 판세가 혼전 양상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평가다. 결국 작은 차이가 승 부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여야 모두 기선 잡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 결과는 내 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알아보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 정치권이

4월 보궐선거, 광주 민심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는 서구을 보궐선거를 놓고 동상이몽식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심이 녹록지 않지 만 내심 '수성'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보 궐선거 결과가 새정치연합의 미래에 결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전통적 지지층 결집이 이뤄질 것으로 보 고 있다.

서구을 내년 총선 가늠자

보궐선거 특성상 투표율이 낮다는 점 에서 경선 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조직 기반이 탄탄한 새정치연합 후보가 낙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제2 의 이정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7·30 순천·곡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정 현 후보가 견고했던 지역주의 벽을 깨고 당선됐듯이 광주에서도 기적을 이루겠다 는 속내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광주의 민 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후보만 잘 내세운다면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서구을 지역 유권자의 표심을 견인할 수 있는 거

물급 후보 공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의당과 국민모임, 옛 통합진보당 등 군소 야당은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의 심장인 광주에서 야권 재편의 단초를 만 들겠다는 움직임이다. 야권 단일 후보로

호남의 기득권 정당인 새정치연합의 독 점 구도를 깨겠다는 의도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최근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을 제외한 야당 세력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연 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 기에 재야세력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 로도 범시민 통합후보 추대에 대한 목소 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광주 서구 을 보궐 선 거를 앞두고 셈법이 분주하지만 정작 민심 은 냉랭하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전반적인 민심은 '냉소' 그 자체다. 광주 민심에 걸 맞는 변화와 혁신의 비전이 나오지 않은데 대한 실망감과 호남 정치권의 초라한 현주 소에 대한 박탈감도 크다는 얘기다.

'광주의 반란'도 배제 못해

거론되는 후보군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좀처럼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순 천·곡성 보궐선거와 새정치연합의 2·8 전대 당권 경선처럼 서구을 보궐선거에 서 '광주의 반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 측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면서 도 '아직 멀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대통합을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에 실망 감이 큰데다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진 정성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정부의 호남고속철 노선 논란 야기, 새 누리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 반대 등이 호남 차별로 비화되면서 지역적 반발이 큰 상 황이다. 광주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담 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 는 한 '제2의 이정현'은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시민사회와 군소 야당의 '단일후보론' 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적 자세'가 읽힌 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과연 현 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 회의적 반 응도 적지 않다. 광주 민심을 잡을 수 있 는 감동적인 후보 단일화와 혁신을 상징 할 수 있는 후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찻 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광주 민심이 마음 줄 곳을 찾지 못하면서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 세의 가변성도 커지고 있다. 일단 선거 결 과가 새정치연합 후보의 완승으로 나타 나지 않을 경우, 차기 총선에서의 물갈이 등 정치 지형 변화도 점쳐진다. 사실상 새 정치연합에 대한 광주 민심의 심판으로 읽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패배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야권 전체에 미치는 후폭풍 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민심 이 어떠한 선택으로 정치 흐름을 만들어 낼 것인지 주목되는 이유다.

/tuim@kwangju.co.kr

은펜칼럼

옥영석 은펜상 2005년 수상자

20여년전 저녁이면 빨갛게 불을 켜는 교회의 십자가조명을 하얀색으로 바꾸자 는 제안을 교회연합회라 할 노회의 홈페 이지에 올린 적이 있었다.

당시 살고 있던 곳은 산위에 있는 아파 트였는데 바로 앞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저녁이면 섬뜩한 빨간 빛으로 베란다 앞 에 버티고 있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베란

빨간 십자가만 십자가는 아니다

다를 쳐다보는 순간마다 섬뜩한 느낌이 든다는 주민들 불평을, 기왕이면 신자인 내가 전달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종교가 없는 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밤이면 밖을 내다보기가 무서울 지경이어서 교회 측에 불 켜는 시간을 조정하거나, 하얀색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어 상급기관 에 진정인지 민원인지 모를 제안을 했던 것이다.

십자가 색이 빨간 것은 세상의 모든 죄 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의미를 모르는 바 아 니었지만, 이웃들에게 민원을 일으키면 서까지 빨간 색을 고집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제기한 것이었지만 돌아오는 반 응은 싸늘하고 차갑기만 했다.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가 빨간 색이여 야만 한다면 모든 십자가를 빨간색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는 하얀 색이거나 원 목의 색상을 그대로 살린 것이 대부분 이다.

밤이면 십자가에 불을 켜는 이유가 늦 은 시각 가난하고 지친 누군가 교회를 쉽 게 찾기 위해서라면 응당 누군가는 교회 안에 있어야할 것이다. 하지만 도회지 대 부분의 교회는 자물쇠나 무인경보기가 지키고 있다. 전기와 조명이 이용되기 전, 교회지붕에 내건 십자가가 빨간색이었는 지도 의문이다.

어쩌다 도심의 야경을 내려다볼 때면 블록마다 빛나는 십자가가 천지다. 예배 당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고, 신자들끼리 만 교류하는 교회는 아무리 많아져도 세

상을 바꿀 수 없다. 교회의 사명이 복음 을 전파하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것 이라면, 전도나 이웃을 구제하는 첫걸음 은 동네에서 만나는 보통사람들과 불특 정 다수에게 먼저 친근하게 다가서는 것

그러니 심야에는 조명을 꺼두거나, 꼭 불을 켜야 한다면 교회안의 십자가처럼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다면 신앙이 없는 이웃들에게도 거부감이 줄어들 것이다. 십자가 조명을 바꾸는 것은 교리의 왜곡 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배려이자 복음을 친근하게 전파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 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 는 코너입니다.

기 고

국립대 후퇴시키는 기성회비 대안 법안



전덕영 전남대 교수·대학평의원회 의장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국가 에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 가 재정이 열악한 50년 전 학부모에게 교 육비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의 기성회계이고, 이 기성회비는 등록 금이 아니므로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대학 기성회에서 그 용도를 최종 승인하였다.

최근 기성회계를 통한 등록금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 부에서는 대안입법을 서둘러 왔다. 그리 고 지난 2월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지금대로 통과

된다면 오히려 국립대학을 후퇴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첫째, 국립대학 등록금 경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경비를 학부모에 게 80%나 부담시키는 상황을 볼 때 등록 금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국립대 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사립대학 과 확실히 다르다. 국가장학금을 사용하 면 충분히 해결된다. 그런데 이번 국립대 학회계법은 국립대학 등록금 경감에 대 한 내용은 쏙 빠졌다. 국가 지원 의지도 규정상 두루뭉술하다. 2011년 법인화국 립대학이 된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 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고등교육예산 규 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 금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국가 가 직접 경영하는 40개 국립대학에 대한 회계 및 재정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한 구 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교육기본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둘째, 수업료의 용도 문제이다. 2014년 국립대학의 수업료 액수는 학기당 평균 48 만원 이었다. 여기에 기성회비 170만원 정 도를 더하여 등록금액이 정해졌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수업료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 수업료에는 직원들의 인건비 지출 부분 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성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100% 포함되어 있다. 기성회계 가 없어진 지금, 학생들 수업료로 학교 직 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업료는 수업에 들어가는 경비여 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수업료로 직원 들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는 학 생과 교수 및 직원이 얼굴을 붉히게 될 것 이며, 이는 대학을 어수선하게 하여 경쟁력 을 떨어뜨릴 것이다. 국립대학 직원의 인건 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

셋째는, 재정위원회의 구성 문제이다. 국립대학의 예산은 주로 대학에 구성된 교수 중심의 평의원회 또는 교수회에서 결산과 함께 심의하며 대학 행정부를 견 제해 왔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11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재정위원회

의 인적구성 거의 절반이 총장 등 대학 행 정부의 당연직이다. 이는 돈을 집행하는 측에 심의 및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견제하는 장치가 너무 미약 하다는 것이다. 총장에 따라서는 예산 집 행에 있어서 총장의 업적 및 홍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등 잘못을 할 수도 있을 터 인데 이를 잘 차단할 수 없도록 입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종 전처럼 대학의 평의원회나 교수회에 두 어야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법령 체계상의 모순이다. 국립 대학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그런데 지금의 국립대학회 계법은 국회가 제정중이므로 국립학교설치 령보다 상위법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법 제 정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서울대법, 인천대법, 전통문화대학법, 한국과학기술 원법 및 기능대학법 등으로 국립의 여러 대 학도 각자의 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회가 법제정을 올바로 한다면 정권 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위에서도 과속을 일삼고 있는데 관 계기관의 단속은 한계가 있다. 현재 거리 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속도감지기를 안 개지역 등에 집중설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인단속카메라가 속도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씨 변화 등도 감 지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단속장비 개선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하루 빨리 이뤄져 106중 추돌이라는 대형 교통사고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社 說

3년차 박근혜 정권 호남은 안중에 없는가

출범 3년차 박근혜 정권을 바라보는 호남인들의 소회는 착잡하다. 심란한 서민경제는 접어두고 집권 2년 내내 호 남은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됐고 국가 예산마저 홀대를 받으면서 분노 를 넘어 말문을 잃을 지경이다.

24일 현재 17개 정부 부처 장관 중 이 기권 고용노동부장관만이 유일한 호남 출신이다. 현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공 직자 출신 211명 중 73명이 영남이고 호 남은 25명에 불과하다. 검찰과 경찰, 국 정원, 국세청 등 이른바 6개 권력기관 장차관급으로 좁히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하다. 31명 가운데 호남은 단 1명이 고 영남은 절반이 넘는 17명에 이른다.

호남 출신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핵심 자리에서 모두 배제됐다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쓸만한 인물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역대 정부 를 보더라도 구색조차 맞추지 못한 노 골적인 편중인사다. 지역 안배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안하무인식 인사에 그

저 놀라울 뿐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 정도를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광주에 자 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지원 등 15개 사 업추진을 공약했으나 4건만 진행되고 있고 예산반영률은 5.5%에 불과하다. 전남도 6조6852억 원이 투입되는 7개 사업에 총 반영률은 3.2%가 고작이다.

지역민들은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 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요구하 지 않는다. 타지역과 다른 특혜나 누적 된 피해의식을 보상받을 생각도 없다. 적어도 영남 등 타지역과 상대적인 형 평은 맞추라는 것이다.

한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에게 요 구되는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균형과 조화다. 박 대통령은 집권 3기 경제회 생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이야말로 성공으로 이끌 열쇠 다. 남은 기간 인사탕평과 공약이행으 로 호남인의 지지를 얻어 국정의 동력 으로 삼기를 바란다.

더욱 대담·악랄해지는 인터넷상 호남 비하

인터넷상의 호남 비하 행위가 더욱 악 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홍어', '전라디 언', '까보전(까고 보니 전라도)' 등으로 상징되는 호남 비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 니지만 이제는 단순한 비하를 넘어 혐오. 저주의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23일 구글에서 '광 주시청'을 검색하면 붉은 나치기(旗) 중앙에 '홍어' 모양이 삽입된 이미지가 뜨는 것을 발견하고 즉각 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홍어'도 모자라 나치기 까지 등장시킨 것은 도를 넘어서는 일 탈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국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본 사가 미국에 있는 구글을 이용했다는 사실만 하더라도 호남 비하에 대한 집 요함이 얼마나 강한지 확연히 드러난 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비하가 더 적 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데다 형사 저벌까지는 법적 한계 도 많아 이를 해결하기에 요원한 실정 이다. 광주시가 구글 사건과 관련해 고 발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에 있는 구글 이 수사에 협조할지, 범죄 혐의를 적용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최근 법원이 잇따라 집단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 사이트에 대 해 제재는커녕 관련법 강화에 대해서 도 손을 놓고 있다. 겨우 한다는 게 방 송통신위원회가 단순 시정 요구나 권 고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극에 달하는 지역 비하는 심각한 범 죄이자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나 다를 바 없다. 당국은 역사 왜곡 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해당 사이트 폐 쇄 등 엄정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광주시와 시민단체 등도 적극 나서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한다. 정치권도 범국가적 차원에서 특정 지역 비하에 대해 엄한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無等鼓 👀

버스커 거리

파리나 더블린 등 유럽에선 길거리 공연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행인들에게 돈을 받으며 길거리에서 연주하는 것 을 버스크(Busk)라고 한다. 버스크를 하는 사람을 버스커(Busker·길거리 악사), 길거리 공연을 가르켜 버스킹 (Busking)이라 한다.

개성있는 버스킹은 그 도시의 문화 와 어울려 특색있는 문화상품이 되기 도 한다. 우리나라에선 2000년대 중반 서울 홍대와 대학로를 중심으로 버스킹

문화가 등장했다. 지 하철 홍대입구 역 주 변은 버스커들의 천국 으로 중국 관광객들까

지 반드시 들리는 여행코스가 됐다. 인 디밴드 십센치(10cm)와 광주 출신 장범 준이 이끄는 3인조 밴드 버스커 버스커 도 홍대를 무대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부산 해운대 일대가 버스킹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세월호 여파로 각종 축제와 공연이 취소되면 서 전국의 버스커들이 몰려든 것도 원 인이지만 멋진 바다 야경과 관광객 등 인파가 많기 때문이다.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여름 매주 금 요일과 토요일에 장르별로 실력있는 버스커 10개 팀을 엄선해 '해운대의 푸

른 밤'이라는 버스킹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버스커 등록제까지 도입해 공연 장소와 시간을 배정할 정도였다.

대구는 광주로 치면 충장로축제와 비슷한 동성로축제의 '킬러 콘텐츠'로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버스킹대회 를 열었다. 세월호 참사로 비록 결선을 치르지는 못했지만 두차례 예선에만 전국에서 200여 개팀이 참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순천만정원에선 80년대 인기 듀엣이

자 원조 버스커로 불 리는 '수와 진'이 매 주 금·토·일에 재능 기부 차원에서 거리

공연을 하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1년 간 공연으로 모은 수익금을 소년소녀 가장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여수에도 버스커 거리가 만들어진다 고 한다. 여수시는 다음달부터 버스커 를 공개 모집해 5월부터 9월까지 주말 마다 다양한 버스킹을 선보일 예정이 다. 관 주도로 추진되지만 일단 기대감 을 갖게 한다.

"너와 함께 걷고 싶다/이 바다를 너 와 함께 걷고 싶어" 버스커의 여수 밤바 다가 벌써부터 설레임으로 가득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안개 잦은 지역 무인속도감지기 집중 설치해야

지난 2월 11일 인천 영종대교 상부 도로 의 서울 방향 차로에서 승용차와 버스 등 106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안개 낀 구간의 시정거리는 10m 에 불과했지만, 매뉴얼상의 기준은 육안 이 아닌 공식 측정치가 적용됐다. 그런데 안개 구간을 서행하던 차들이 일시적으로 안개가 걷힌 구간을 지나면서 속도를 올 렸다가 다시 안개 구간으로 들어서면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이지역이 안개 지역으로 감속을 해야 하는 지역이였는데 운전자가 감속 을 하지 않은 과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위와 같이 안개지역이 많 아서 사고가 반복이 되는 곳은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예산을 집 중 투입해 안개지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고지역에는 속도위반 적발카메라가 설치돼 있고 제한 속도는 100km였다. 많 은 차량 운전자들이 이상기후 시에는 감 속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 하고 과속 운행을 하고 있음으로써 수많 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운전자는 안개지역이나 얼어있는

▲손성주·광주 남구 용대로

光则日報

The Kwangju Ilh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中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항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